



## 고등교육 정책/소식

### 21세기 창조적 선진 학습강국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출범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직무대행 서남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창조적 선진 학습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 평생교육정책 추진의 중추기관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원장 박인주)을 설립하고, 2월 15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의 심화, 글로벌화와 지방화의 진전, 주5일제 확산 등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공포(2008. 2. 15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에 따라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독학학위검정원)에서 분산 운영되어온 3대 국가 평생교육 추진기구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처럼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평생학습도시, 성인문해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사업과 학습결과의 평가·인정제도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사업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수립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종사자 양성·연수
-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도 운영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계좌제 통합 관리·운영 등

특히 주요사업 중 평생학습계좌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관리하고 이를 평가·인정하는 제도로써, 향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와 연계하여 개인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촉진·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부,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공모

◎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대학이 연계하여 중소기업에게 근로자에게 High-Tech 훈련을 제공하는 총 775억원 규모의 '권역별 직업중심대학(Bridge)' 사업이 공모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는 훈련비용, 시설·장비비, 운영비·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기업-대학-협력업체 간에 상생의 가교(Bridge)를 놓겠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역별 직업중심대학(Bridge)' 사업을 공모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사업은 2006년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삼성전자·삼성SDI, 관련 협력업체 간에 이뤄지고 있는 실제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직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 각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훈련비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훈련을 위한 전용 인프라로서 시설·장비비(최대 3년, 연 15억 원 한도), 인건비·운영비(최대 6년)가 별도로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해당 권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체 근로자 훈련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비학위과정으로 첨단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사회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에게 고품질 훈련을 비학위과정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앞으로 이러한 지역거점대학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 연 400만 원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나 지방대 인문계열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벼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신설하여 대학생 장학 지원을 확대한다고 2월 1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설됐으며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그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학 성적이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내신이수과목 절반 이상이 6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지원 금액은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 수준인 연 4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재학 중 일정 학점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09년도는 1학년과 2학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2학년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대학의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감면이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등록금이 장학금보다 많은 경우에도 각 대학에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학비를 면제하는 제도를 병행하도록 권고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금 부담없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인문계 장학금’은 지방대 인문계열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방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지역 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4년제 대학 인문·사회·교육계열 2008년 신입생과 재학생 중 약 2,300여 명에게 총 125억 원을 지원한다.

선발인원은 해당 대학 인문·사회·교육계열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대학에 배정되며, 대학은 자체 선발 기준을 정하여 배정된 수의 장학생을 선발·추천하면 된다.

지방대 인문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공립대학은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 사립대학은 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급한다. 재학 중 평점 3.0 이상의 학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지방대학 인문계 장학금’ 대상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3월 5~31일 사이에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확인 후 4~5월경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2007년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 결과발표

○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2007년 전국 96개 일반대학 교육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육대학교·교대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으로 나누어 98년부터 5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고, '07년의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는 '02년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이 평가의 목적은 일반대학 교육과가 교원양성기관으로서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구성원의 협동적 노력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6개 일반대학 교육과에 대하여 전문가 23명으로 평가단(단장 : 이종각 강원대학교 교수)을 구성하여 학과 경영영역, 교육과정·수업영역, 교수·학생영역, 교육여건영역 등 4개 영역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의 특징은 현장방문 평가에서 평가위원이 우수사례를 발굴 선정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기관인 일반대학 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원양성기관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대학 교육과의 학과경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평가는 영역별 결과와 종합 결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모두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 요망’으로 등급을 결정하였다.

교육학과군 '최우수'는 연세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이고, '우수'는 경성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이며, '보통'은 강남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로 선정되었다.

유아교육학과군 '최우수'는 강남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배재대학교, 부경대학교이고, '우수'는 강릉대학교 등 9개교이고, '보통'은 경기대 등 11개교로 선정되었다.

교과교육학과군 '최우수'는 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충남대학교 기계·금속공학교육전공, 충남대학교 기술교육전공이고, '우수'는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등 8개교이며, '보통'은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등 10개교로 선정되었다.

특수교육학과군 '최우수'는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이고, '우수'는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등 6개교이며, '보통'은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등 9개교로 선정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탑재하여 일반대학 교육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8년도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학제간 공동연구(3인 이내) 및 개인연구를 통하여 창의적인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8년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핵심기초는 5월, 학제기초는 9월에 연구가 착수될 예정이며 핵심기초 연구비의 일부는 우수신진 연구와 미래도전연구에 지원된다.

중점추진방향은 첫째, 미래도전연구에서 혁신성과 도전성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지원대상을 2007년도 중견과학자에서 2008년도의 모든 연구자로 확대하여 고위험, 혁신연구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개인연구지원 확대를 통한 선정률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이 2007년 960억원에서 2008년 1,162억원으로 202억원 증액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된 금액이다. 셋째,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와 수학과교육분야를 추가하여 새로운 인접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번 공모는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서 자유공모로 실시하며 대학(교) 교수, 공공 및 민간연구소 선임급 이상 연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www.most.go.kr).

특정기초연구사업은 1986년부터 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05~07) 9,467편의 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어 연평균 3,156편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2007년도 특정기초연구사업으로 발표된 논문 수는 총 3,399편으로 이 중 2,254편이 SCI 학술지에 게재(66.3%) 되었다.

또한, 연구수행과정에서 석·박사 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경험을 체득한 신진연구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내외 창의적 기초연구능력 확대에 기여하였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

○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에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에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고 2월 4일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은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07.10.30. 발표)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대학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학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학별 입학정원 결정원칙은 서울 권역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는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 정원에 차등을 두었으며, 지방 4대 권역의 경우,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권역별로 차상위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획득한 점수 및 권역간 법조인 배출 수준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하였다.

한편, 법학교육위원회는 제반 지역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간 입학정원을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하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07.12.14. 발표)'에 따라, 설치인가 대학 및 정원심의 과정에서 대학이 취득한 평가점수와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5%의 조정수치를 서울권역에 부여하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의 입학정원 배정비율을 57%(1,140명):43%(860명)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인 수도권과 지방권(강원 포함) 배분비율은 55%(1,100명) : 45%(900명)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본인 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부단계의 법학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법과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

▼ 시도별 선정결과

시·도명	대학명	배정정원	대학명	배정정원
서울	서울대	150명	경희대	60명
	고려대	120명	서울시립대	50명
	성균관대	120명	중앙대	50명
	연세대	120명	한국외대	50명
	이화여대	100명	건국대	40명
	한양대	100명	서강대	40명
	소 계	12개 대학 1,000명		
경기	아주대	50명	소계	50명
인천	인하대	50명	소계	50명
강원	강원대	40명	소계	40명
충북	충북대	70명	소계	70명
대전·충남	충남대	100명	소계	100명
전북	전북대	80명	소계	140명
	원광대	60명		
광주·전남	전남대	120명	소계	120명
대구·경북	경북대	120명	소계	190명
	영남대	70명		
부산·경남	부산대	120명	소계	200명
	동아대	80명		
제주	제주대	40명	소계	40명

▼ 향후 추진 일정

추진업무	일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구성·운영	’08.2.~
최종 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08.7.~8.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08.9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09.3월

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의 핵심축이 될 신규 누리사업단 13개 선정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하 NURI사업) 2007년 하반기 신규 사업단 선정 결과를 1월 25일 발표하였다.

▼ 선정 사업단 현황

(중형(3개) : 대권역별 각 1개)

권역	중심대	사업단명
충남	한국기술교대	충남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인포트로닉스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
부산	부경대	지능형 지구환경재해 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광주/전남	광주대	공공디자인 3UP 전문인력양성사업
계	3개	

(소형(10개) : 대권역별 각 3개 (\*동남은 4개))

권역	중심대	사업단명
충북	충북대	첨단소재 기반 인력양성사업
충남	공주대	통합방재기술 인력양성사업
대전	충남대	반도체기반 에너지기술 인력양성사업
대구	경북위덕대	호텔 연계형 외식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부산	영산대(부산)	호텔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순환구조 교육혁신 사업
경남	경상대	LOHAS 경남 생태환경자원 전문인력양성사업
경남	영산대(양산)	신승수출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전북	전주대	환경소재 방사선융합기술 산업인력 양성사업
광주전남	동신대	코디네이션 전문인력 양성사업
광주전남	목포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마을 정주혁신 전문인력양성사업
계	10개	

‘한-아제르바이잔 교육협력약정’ 체결

○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월 25일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미시르 마르다노프(Misir Mardanov) 교육부장관과 「한-아제르바이잔 교

육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은 양국 교육기관 간 교류, 전문가 파견, 상호학위 및 졸업장 인정을 위한 정보교환, 공동학술연구, 상대국이 파견하는 국비유학생에 대한 지원 등 교육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우리 측에 약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양국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수정안을 교환해 왔으며, 2007년 6월에는 아제르바이잔 교육장관이 직접 방한하여 동 교육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11월 말 아제르바이잔 측이 우리 측 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측 내부절차가 종료되는 금년도 초 서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아제르바이잔은 최근 3년간 교역량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에너지·자원·도로 및 항만건설분야 협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07. 4월 기준 한국유학 아제르바이잔 학생은 1명에 불과하는 등 양국 간 교육분야 협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번 교육약정 체결은 그간 우리 정부가 쉐 아제르바이잔 관계에 있어서 주력해 온 에너지·건설 등 경제분야 협력을 넘어, 교육·문화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미래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약 5천여 명의 국비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주요 유학대상 국가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최초 외국대학 분교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STC-KOREA) 광양에 설립**

○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 최초 외국대학 분교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STC-KOREA)의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교를 두고 있는 STC 그룹은 전라남도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서를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분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 STC : Shipping and Transport College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10월 STC 그룹으로부터 설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재 서울대 교수)의 심사를 거쳐 설립을 승인하였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는 해운운송학 석사과정 40

명을 모집하여 오는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본교 교수들이 방문하여 전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국제화된 교육과정을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대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발표**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22일 수능등급제 보완을 위해 현재 예비 고3이 시험을 치르는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능등급과 표준점수·백분위를 병기하고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도 대학별로 자율화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따르면 1단계 조치로 올해 고3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2009학년도 전형부터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를 병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이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생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것을 중단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생부를 반영

**▼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b>1단계</b>	
• 수능 등급제 보완 - 등급, 표준점수, 백분의 병기	올해 고3부터 (2009학년도 입시)
• 대입 자율화 조치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교육부 대입업무 대학협의체 이양	올해 고3부터 (2009학년도 입시) 2008년 상반기
• 대학 책무성 강화 -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 -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	2009학년도부터 2008년 상반기
<b>2단계</b>	
• 수능 응시과목 최대 4개로 축소 - 탐구영역, 외국어영역서 최대 2과목 선택 - 영어과목 수능 분리·상시 능력평가 전환	올해 중3부터 (2012학년도 입시) 올해 중2부터 (2013학년도 입시)
<b>3단계</b>	
• 대입 완전 자율화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입법 - 수능 업무 교육과정평가원 완전 이양	2012년 이후 추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선진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의 학교생활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12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최근까지 교육부가 학생선발 방식을 규제해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배경에 따라 인수위는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대학협의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대학협의체가 기본계획 수립 등 대입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올해 5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기능이 폐지되며,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학은 협의체가 정한 대입전형기본계획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해야 한다.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기본계획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주관해 대학의 입학전형 기본방향, 전형자료 및 유형, 전형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게 되는 데 2008년 6월 전까지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학협의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며 2009학년도부터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교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층원 결과 등을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부터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반영, 공개하게 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돼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 규제를 통해 본고사 금지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대학의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대학협의체가 논술시험 기준 등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수위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해서, 수능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택과목 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문항 수와 응시시간은 늘리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오는 2012년 이후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 명문화 및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된다.

### 노동부, 학자금 전액을 연 1.3%~1.5%의 낮은 금리로 대부

○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학(원)재학 근로자에게 정부가 연 1.3%~1.5%의 낮은 금리로 학자금 전액을 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전문대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체필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근로자 학자금·훈련비 대부사업은 정책금리형태의 가장 낮은 이자로 학자금·훈련비를 대부함으로써 일터와 학습이 병행되어(Work to School & School to Work)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개통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위원회 활동사항의 홍보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psdr.moe.go.kr>)를 개통한다고 1월 18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업무처리 절차는 물론 회의 일정과 위원회 활동 상황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귀호 위원장 등 대통령이 위촉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한 바 있다.